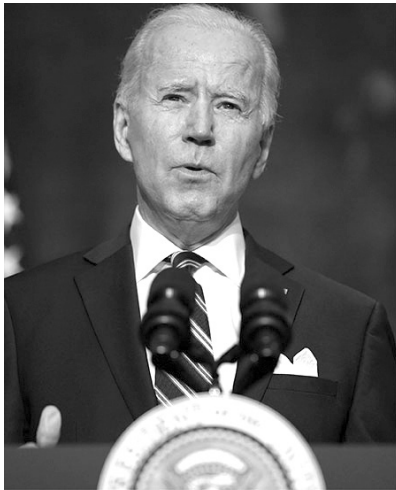




## 美 DOE 장관, 원자력발전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원방안 시사

- Energy Secretary Jennifer Granholm floats federal subsidies for nuclear power plants -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자력발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니퍼 그란홀름(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은 지난 목요일 하원에서 열린 세출 소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미국은 단 한 번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 적이 없다(The DOE has not

historically subsidized plants)”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고려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그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인 ‘American Jobs Plan’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but I think this is a moment to consider and perhaps in the American Jobs Plan or somewhere to make sure that we keep the current fleet active)”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 없이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결코 없다(We are not going to achieve our climate goals if our nuclear power plants shut down)”고 강조한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We have to find ways to keep them operating)”고 말했다.

### 원자력발전 없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은 불가능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고, 원전설비도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정치적 반대라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리노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2기의 원전이 올해 중으로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고, 뉴욕 주에서 운영 중이던 Indian Point 원전은 이미 지난달에 폐쇄되었다. 미국 전체로 봐서도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로 건설되어 운영에 들어간 원전은 단 1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원전도 조지아 주에서 건설되고 있는 단 2기의 원전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90기가 넘는 원전이 운영되면서 미국 전체 전력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미국 청정에너지원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부문에서 탄소배출 넷 제로(Net Zero)를 실현하고, 2040-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President Biden’s net-zero electricity by 2035 power sector target outstrips even the greenest-leaning states’ targets to eliminate emitting generation by 2040-2050)”고 에너지 분야 컨설팅 기관인 ClearView Energy Partners의 Timothy Fox 부사장은 말했다. “그러나 2035년 전력부문 Net Zero라는 야심찬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원자력발전 없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마법과도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Net-zero electricity by 2035 already looks like a heavy lift; doing it without the existing nuclear fleet seems more like magical thinking.)”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미 백악관,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방안 검토 중

바이든 미 대통령은 탄소배출 제로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선택했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신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방안(tax-credit subsidies)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국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의 Joe Manchin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 더 이상 조기에 폐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I urge you to take action to preserve our existing nuclear fleet and prevent further closures)”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서한을 통해 “원자력발전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연방정부는 이같이 중요한 국가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금 즉시 취해야만 한다(I believe the federal government must use all the tools it has to protect this vital resource)”고 촉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점점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기 위한 자리에서 원자력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

메사추세츠 주 출신의 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원전에 대하여 2035년까지 단계적인 폐쇄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몬트 주 출신의 Bernie Sanders 상원 의원도 그린 뉴딜 정책을 서약하는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Sanders 의원도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의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운영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대표적인 환경단체 중의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Lukas Ross도 노후화된 원전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재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너지 시대를 늦추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와 바이든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곳에 예

산을 낭비하는 일을 결코 벌여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반대론자들은 비단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규원전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신규원전은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설이 끝나 운영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도 막대한 보안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과 다른 에너지원들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은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다. 미국의 상용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현재 80,000톤이 넘는 상황이라고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부지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와는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탄소배출 제로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은 다른 에너지원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일부 측근들을 잘 설득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경우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그의 정책적 추진력은 보다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Fox 뉴스는 전했다. 그럴 경우 천연가스를 일종의 ‘가교 에너지’(bridge fuel)로 밀어붙이려던 일부 정책입안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Fox 뉴스는 덧붙였다. *KMIF*

Rich Edson / Washington correspondent

〈05-07〉

FoxNews